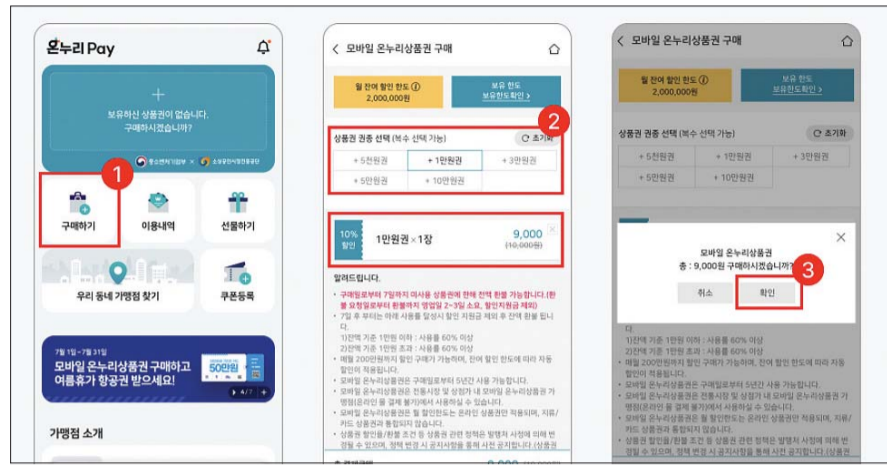


조폐공사 vs 비즈플레이,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갈등 격화'

비즈플레이
“3월 발행 확률 100만분의1 정도 사업연장에 비용 3억 떠안아 사업포기, 소상공인 피해 줄여야”

조폐공사
“입찰평가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 3월1일 정상오픈에 철저 준비중”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카드형과 모바일을 합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의 통합 발행이 두달 늦춰진 가운데 오는 3월1일부터 정상 케도에 오를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공공기관인 한국조폐공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중소기업인 웹케시 계열사비즈플레이간 갈바싸움이 팽팽하게 벌어지고 있다.

일부에선 신규 사업자로 선정된 조폐공사의 '갑질 논란'까지 제기하고 있다.

6일 이들 기관과 관련업체에 따르면 조폐공사는 카드형 온누리상품권,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을 오는 3월1일부터 통합해 발행할 계획이다.

조폐공사는 기존에 KT(카드형)와 비즈플레이(모바일)가 각각 맡고 있던 사업에 대해 지난해 8월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통합사업자로 선정된 바 있다.

입찰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으로 온누리상품권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소진공이 했다.

화제를 인제하는 조폐공사는 기존 지류(종이)형 온누리상품권도 발행해 왔다. 이에 따라 조폐공사가 지류 및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사업을 모두 거머쥐게 됐다.

그런데 사업자 교체 과정에서 이미 사달이 났다.

새 사업자로 선정된 조폐공사는 당초 올해 1월1일부터 온누리상품권을 통합 발행해야 했다. 온누리상품권 대목인 설 명절이 1월 말에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폐공사는 준비 부족 등을 이유로 지난해 11월 중순께 통합 발행 시기를 두달 미뤄 3월부터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늦춰진 2개월의 연장 기간 동안 카드형과 모바일 상품권 발행은 기존 사업자인 KT와 비즈플레이가 각각 맡도록 했다.

비즈플레이의 모기업인 웹케시 석창규 회장은 지난 3일 서울 영등포에 있는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미 지난 9월 조폐공사와 업무 회의를 하면서 1월1일 정상 오픈이 불가하다는 것을 인지했다. 이에 앞서 우리는 이전 사업자로써 신규 운영사업자가 고려해야 할 14가지 리스크와 사전에 반영해야 할 중점 사항을 제공했다. 결국 우리 예상

대로 조폐공사는 오픈 시기를 맞추지 못했다. 하지만 조폐공사가 다시 약속한 3월 1일 정상 오픈도 이상태라면 어려울 것이다. 단언컨데 (3월 1일 정상 발행)확률은 100만분의 1 정도일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조폐공사는 비즈플레이 측에 ‘플랫폼 설계도(ERD)’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기존 사업자가 두달간 연장 발행하면서 추가 비용이 들어가는데 비즈플레이의 경우 약 3억원의 비용도 떠안게 됐다. ‘갑질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이유다.

석 회장은 “연장에 대한 손실비용을 우리가 부담하는 대신 3가지 조건을 받아들이면 조폐공사의 연장 제안을 수용하기로 했다”면서 “3가지 조건이란 하도급을 중지하라는 것과 ERD에 대한 정보보호약서 그리고 (정상)오픈시 우리의 책임이 없다는 것을 약속해 달라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석 회장은 관련 내용을 성장훈 조폐



웹케시 석창규 회장이 지난 3일 서울 영등포 본사에서 계열사 비즈플레이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승호 기자

공사 사장에게도 개인적으로 발송했다고 밝혔다.

석 회장은 “왜 민간의 영역에 공공기관이 들어와 이렇게 허술하게 사업하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다. 이 사업은 플랫폼 구축사업이 아니라 운영사업이다. 그런데 조폐공사는 관련 사업에 대해 하도급 계약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엄연히 불법”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입찰 주무기관인 소진공은 “선불 전자기금 수단 발행 및 관리업무와 관련해 제안요청서, 국가계약법 등 관련 법률을 외부 전문가 및 법무법인과 검토한 결과 (불법 하도급 지적에 대해) 해당사항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통합사업을 놓고 벌어지고 있는 잡음 때문에 모바일 온누리상품권내 ‘선물하기 기능’은 설 명절 이전인 이달 10일까지만 가능할 전망이다.

또 3월1일 예정된 오픈 일정 때문에

오는 2월15일부터는 시스템 변경 등으로 관련 업무가 멈춰 디지털 온누리상품권도 이날부터 사용할 수 없다.

소진공측은 “이용이 많은 설 명절 동안 모바일 상품권 선물하기 기능에 제약이 있어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카드형 상품권 구매·이용을 적극 안내할 계획”이라며 “아울러 설 명절 동안엔 카드형, 모바일 모두 정상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석 회장은 “이미 확인된 조폐공사의 하도급에 대한 법 위반 여부는 향후 감사원 등 기관이 담당할 문제이고, ERD 기술 유출 가능성 역시 우려가 현실화됐을 때 조폐공사측에 책임을 물으면 된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조폐공사는 지금이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사업을 포기해 관련 업무 혼란으로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자칫 ‘제 2의 티메프 사태’가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런 가운데 소진공은 오는 3월1일 약속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통합 서비스 시작을 위해 모든 역량을 동원한다는 방침이다.

조폐공사도 지난 5일 낸 보도자료에서 “발주기관인 소진공의 조달청 입찰 평가에 따라 적법하게 사업을 진행 중이며 3월1일 정상 오픈을 위해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면서 “법인카드, 계좌이체 구매 기능, 직원별 상품권 대량 발송 등 기업구매 웹사이트 구축을 완료했으며, 모바일 상품권 데이터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모태펀드 관리보수 체계 바뀌 투자 활성화

중기부 ‘손상차손 가이드라인’ 개정 5년 이내 기업, 관리보수 삭감 미적용

중소벤처기업부가 모태펀드 자펀드 관리보수 산정 기준이 되는 ‘손상차손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2024년도 모태펀드 자펀드 회계감사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발표한 선진 벤처투자 시장 도약방안의 후속조치로, 벤처캐피탈이 도전적인 투자를 이어가도록 모태펀드 자펀드 관리체계를 시장 친화적으로 개편한 것이다.

6일 중기부에 따르면 투자기업의 경영 개선이 예상될 경우 회계감사인 검토 하에 관리보수 삭감의 유보를 허용키로 했다. 투자기업의 일시적인 자본잠식 등으로 관리보수가 삭감되지 않도록

〈유의미한 후속투자 요건〉

/자료=중소벤처기업부

구분	현행	개정
투자자	기관투자자(VC, 법인 등)	(현행과 동일)
투자형태	지분투자	지분투자,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 조건부지분인수계약, 조건부지분전환계약 *단, 상환 만기일 2년 이상
투자금액	지분율 3% 이상	지분율 3% 이상 또는 투자금액 30억원 이상

해 모태펀드 자펀드의 안정적인 운용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업력 5년 이내 기업에는 재무제표 약화 등에 따른 관리보수 삭감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는 매출이 발생하기 어려운 초기기업의 특성을 고려한 것으로, 최근 일부 위축세를 보이는 초기 투자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투자기업의 자본잠식 등으로 관리보수가 삭감된 이후 투자금을 회수한 경우에

는 그간 삭감된 관리보수를 소급 지급한다. 기업의 재무제표보다는 시장에서 인정받은 기업가치에 기반해 관리보수를 지급한다는 취지다. 관리보수가 회복되는 ‘유의미한 후속투자’ 요건(시각률)도 완화한다. 기존에는 지분투자만 인정했지만 전환사채(CB)·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 등을 폭넓게 인정하기로 했다. 투자금액도 기존 지분율 요건(3%) 외 금액 요건(30억원)을 신설한다. /김승호 기자

중진공, 구조혁신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13일부터... 5인 이상 중소기업 대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기업들의 지속적인 성장 동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2025년 구조혁신지원사업’ 참여 기업을 오는 13일부터 모집한다.

6일 중진공에 따르면 구조혁신지원사업은 탄소중립, 디지털전환 가속화 등 급격한 산업 구조 전환과정에서 발생하는 중소기업의 구조적 애로 해소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구체적으로 ▲신사업 분야 전환을 위한 사업전환 컨설팅 ▲디지털 역량 향상을 위한 디지털전환 컨설팅 ▲노동환경

경 변화에 능동 대응을 위한 산업·일자리전환 컨설팅 ▲후속 연계사업 등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사업·디지털·일자리전환을 희망하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중소기업이다. 중진공은 올해 진단 1000개사, 컨설팅 1040개사 가량을 선정해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 참여기업의 비용 부담은 없다.

참여기업은 구조혁신 대응 수준과 사업전환 타당성을 진단받고, 기업의 수준을 고려한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구조혁신 로드맵을 수립할 수 있다.

/김승호 기자

휴롬, 온실가스 감축 인증서 획득

1년간 온실가스 21만톤 감축

휴롬이 온실가스 감축 및 순환자원 생산 인증을 받으며 ESG 경영에 추가로 나섰다.

휴롬은 한국스코프쓰리협회로부터 온실가스 감축 인증서 및 E-순환거버

넌스로부터 전자제품 자원순환에 의한 순환자원 생산확인서를 획득했다고 6일 밝혔다. 온실가스 감축 인증서는 원자재 공급, 물류, 사용 후 폐기물 처리 범위에서 온실가스 감축 성과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문서다. 순환자원 생산 확인서는 폐기물을 순환자원으로 전환

하여 새로운 자원을 생산한 기업에게 발급하는 인증서다.

이번에 인증받은 전자제품 자원순환 활동 및 온실가스 감축 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이다. 해당 기간 동안 휴롬은 폐전기·전자제품 회수 및 재활용을 통해 7만3110kg의 순환자원을 생산해 총 20만8918kgCO₂eq. (이산화탄소환산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했다. /김승호 기자

기보, 수출기업 등에 시설자금 보증 확대

고정보증료율 1.0% 적용

기술보증기금(기보)이 기업투자 촉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설자금 보증지원을 확대한다.

기보는 정책지원이 필요한 중점분야에 대해 올해 한시적으로 시설자금 우대지원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관련 보증제도 개선과 함께 적극적인 보증공급으로 기업의 설비투자 확대를 유도, 역동경제 구현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시설자금 우대지원 대상은 기보의 중점지원 분야인 ▲신성장 4.0 ▲지방소재기업 ▲수출기업 등이다.

기보는 지원대상 기업에 고정보증료율 1.0%를 적용한다. 신속한 보증지원을 위해 내부 심사과정을 간소화하고, 특히 전액해지조건 시설자금 보증의 경우 기업 신용도 검토를 완화해 일시적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점분야 기업에 대한 정책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김승호 기자